

유급제 1년, 지방의원 변한 게 없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지 1년이 지났다. 주민들은 한해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게된 지방의원들에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활동을 기대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과거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정활동은 뒷전이고, 정치권 줄서기나 잇속 챙기기 등 '잿밥'에 관심을 쏟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의원 1인당 5천4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청사의 2개 국(局)을 밀어낸 다음, 수억원을 들여 개인 사무실을 넓혔다. 시의원들은 또 연봉과 별도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매년 7만원 씩의 수당을 받고, 해외여행 경비도 지원 받는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대구시로서 부담을 느끼는 예우다.

그러나 대구시의회가 지난 1년간 발의한 조례는 고작 10건(1인당 0.34건)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광역시의회 가운데 꼴찌이고,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 0.89건인 울산시의회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대구시의회가 입법정책 지원을 위해 4-7급 직원 10명을 둔 것을 감안하면, '놀고 먹기로 작정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말이 없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은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집행부를 감시하기는커녕, 업체

로비에만 신경을 써 민간위원들의 눈총을 받기 일쑤다. 참으로 염치가 없다.

경북도의원들 역시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0.36건에 그쳤다. 주민들 사이에 '유급제 취소하라'는 여론이 쏟아지는 이유를 알만하다.

연말 대선을 앞둔 요즘 지방의원들의 움직임은 더욱 가관이다. 지방의회는 보이지 않고 대선 후보자들의 '꼬봉' 노릇하기에 급급하다. 대선 후보가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기간, 의정활동은 올 스톱이다. 유세현장을 쫓아다니며 지지를 선언한다고 열을 올린다. 도대체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음주폭행 등의 추태도 예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경북도내 일부 지방의원이 술을 마시고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공무원과 주먹다짐을 벌이다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추태가 이어졌다. '존경하는 의원님'과는 애당초 거리가 멀다.

세상에 '공짜밥'은 없다. 지방의회들에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그만한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불성실한 의정활동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급여를 지급하는 주민들이 언제까지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가. 지방의원들도 이제 변해야 하지 않겠는가.